

#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김두열 | 명지대학교 교수 | duokim@mju.ac.kr

## I. 머리말

서유럽에서 중세가 막을 내리고 근대 국민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1500년경 이후 지난 500여 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요 국가들의 경쟁과 협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재조직되는 과정이 부단히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의 이전은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과정이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력은 이러한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여부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으로 항상 작용하였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대외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틀을 국제경제질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국제경제질서와 국제정치질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였다. 어떤 나라의 경제력 상승은 국가 간 지위의 변화와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고 국가 간 힘의 우열을 규정하는 물적 토대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국제정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간 충돌을 야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배태하는데, 한 나라가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여부는 근본적으로는 얼마만큼의 물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상과 같은 고려는 국제경제질서와 국제정치질서 가운데 무엇이 근본적이라거나 우위에 있는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질서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국제정치질서 동학(dynamics)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제경제질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 본 글은 이석·조병구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제5장인 김두열, 「역사적 사례 분석: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국제정치질서란 기본적으로 각국의 정책의지 그리고 상대 국가들의 반응을 고려하는 전략적 고려의 산물임에 비해, 국제경제질서는 정책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주어진 조건들, 즉 부존자원(endowment)이나 생산능력과 같은 기초요인(fundamental)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기초요인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기본 열개가 짜여진 국제경제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국제정치질서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정치질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의지와 복잡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인데, 이러한 의지나 고려들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있어서 경제적 기초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추린 다음에도 각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일지 궁구할 때 각국의 물적 능력이나 제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의 정책당국자들과 연구자들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정치질서와 세계경제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논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세계정치경제질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비교적 가까운 시간 안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최강국들의 국제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의 국제정치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를 이해하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최근의 국제정치질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혹은 전제로서,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역사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장기적인 현상이다. 어떤 나라가 국제경제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세계경제질서의 틀을 마련하거나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은 한 세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경제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최근 일어난 개별 사건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큰 흐름을 보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 변화 나아가 이것과 국제정치질서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일반화된 논의는 몇 권의 책이 필요할 수 있는 큰 작업이다. 본 장은 이러한

거대 작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본 종합연구의 일부로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논의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도록 한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국제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지난 5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준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즉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헤게모니 국가가 변화하고 질서의 기본 열개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시기들보다 비교적 현시성이 높다.<sup>1)</sup> 둘째, 이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제정치질서가 바로 현재의 그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존재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본 장 이후의 논의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시기를 이렇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변화가 왜 발생하였고, 그 과정은 어떠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인류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논하는 것은 여전히 거대한 작업이다. 본 장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여 현재 세계경제질서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구조와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구와 GDP로 측정되는 경제규모, 그리고 일인당 소득이다. 이하에서는 이 정보를 중심으로 놓고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는 정도로 경제력 수준 및 장기적 변화를 살펴본 뒤, 이것이 국제경제질서 형성과 변화에 시사하는 바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주마간산 격의 논의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주제를 극도로 제한된 방식으로 그리고 짧은 지면에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부족하나마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보면 실 새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급속하게 진행되는 논의들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자칫 이러한 개별 사건들이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현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힘을 쏟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본 장은 객관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헤게모니

1) 물론 이것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를 논의로 함을 전제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언명이다.

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질서 변화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경제력이 역전된 데 따른 것이며, 이러한 역전은 19세기 동안 두 나라의 장기 경제성장이 가져온 결과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논의의 전사(前史)로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경제의 부상, 그리고 19세기에 걸쳐 일어난 영국과 미국경제의 장기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것들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그리고 전간기(戰間期, 1919~39년) 세계경제질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논구해 보기로 한다.

## II. 전사(前史): 산업혁명과 영국경제의 부상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1760년경부터 1830년까지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이 변화는 지난 200년간 인류 역사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

산업혁명은 연속적이고도 빈번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빠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류를 맬서스 함정(Malthus Trap)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이다.<sup>2)</sup>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이 느리고 단발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인류문명 탄생 이후, 지난 5천년의 기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개발은 간간이 이루어질 뿐이었기 때문에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증가는 곧 증가된 인구를 부양하는 데 소진되기 일쑤였고, 일인당 소득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역사는 낮은 인구증가 그리고 항시적 영양부족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낮은 소득수준이 큰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흔히 맬서스 함정이라고 부른다.<sup>3)</sup>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인구증가 간의 관계를 역전시킨 계기였다. 19세기 이후 지난 200년

2) Malthus(1985), 그레고리 클라크(2009).

3) Fogel(2004).

동안 인류는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의 증가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인류는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나 지난 200년 동안 폭발적 인구증가와 빠른 소득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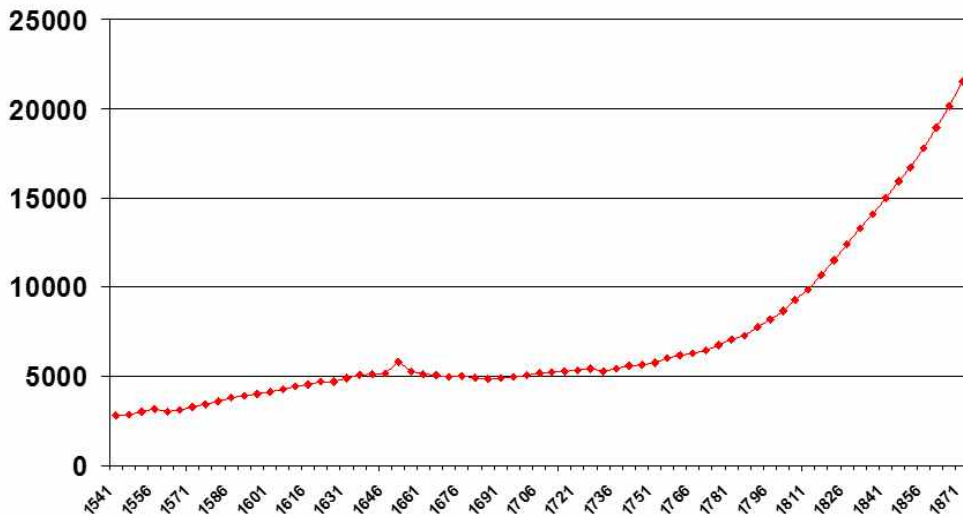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영국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국인구사에 대한 E. A. Wrigley와 Roger Schofield의 기념비적인 연구는 16세기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300여 년 동안의 인구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산업혁명의 혁명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4)</sup>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1541년부터 1800년까지 영국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4%였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인 1800년부터 1870년까지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4%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A)).

인구증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역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변화하였다. [그림 1(B)]가 보여주는 것처럼 18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인구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생산성 증가가 정체하거나 느리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맬서스 동학이 시사하는 것처럼 임금의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인구와 임금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18세기 말이 되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1] 영국의 인구와 소득수준(1541~1871년)

(A) 인구

(단위: 천명)



4) Wrigley and Schofield(1981).

[그림 1]의 계속

(B) 인구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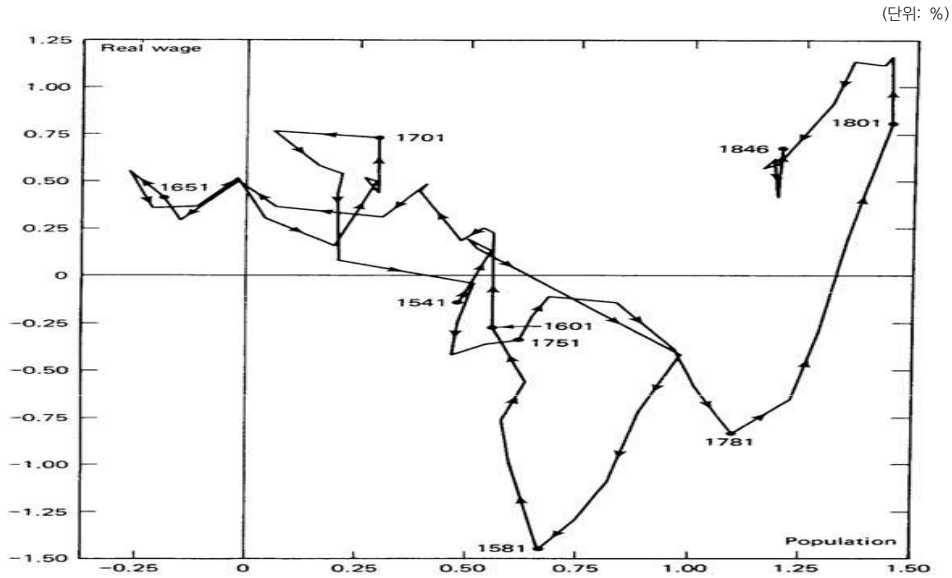


Figure 10.4: Annual rates of growth of population and of a real-wage index

자료: Wrigley and Schofield(1981), p.207, p.410.

즉,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임금이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성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단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산업혁명의 혁명성은 동 시대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300년 전, 즉 서유럽에서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시작된 1500년경을 살펴보면 영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볼 때 서유럽에서 그다지 앞서 나가는 국가는 아니었다. 인구규모는 390만명으로, 이는 당시 프랑스의 1/4 수준이었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그림 2(A)). GDP 역시 비슷한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2(B)). 일인당 소득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업이 발달했던 이탈리아보다는 크게 뒤진 상황이었다(그림 2(C)).

이러한 상황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하였다. 네덜란드는 비록 인구나 경제규모는 작았지만, 국제적인 상업활동에 힘입어 일인당 소득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게 되었고 경제적 지위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sup>5)</sup> 일인당 소득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우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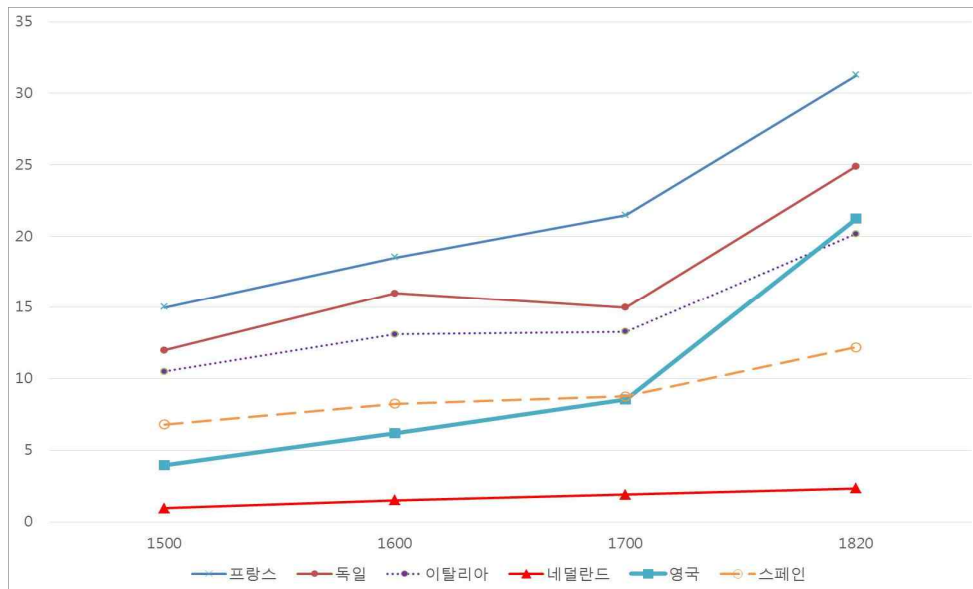
19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자리는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산업혁명 때문이었다.

영국경제의 성장은 이미 16, 17세기부터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영국의 우위를 단순히 산업혁명 때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sup>5)</sup>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1700년부터 1820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변화는 그 이전 기간의 성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우선 인구를 보면 1700년부터 18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그 이전 시기보다 높은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1820년 인구규모는 1700년보다 50~60%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인구증가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컸다. 1700년에 860만명이던 인구는 120년 만에 2.5배에 달하는 2,100만명이 되었다. 그 결과 300년 전에는 프랑스의 26% 정도에 불과하던 인구규모가 1820년에는 70% 수준까지 육박하였다.

[그림 2] 유럽 주요 국가의 인구, GDP, 일인당 GDP(1500~1820년)

(A) 인구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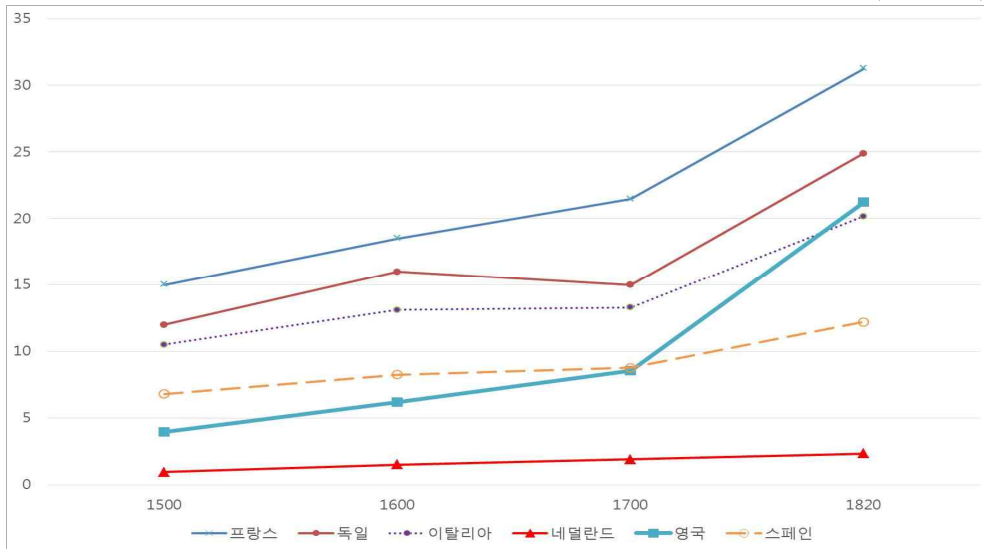
5) Allen(2009).

6) Allen(2009).

[그림 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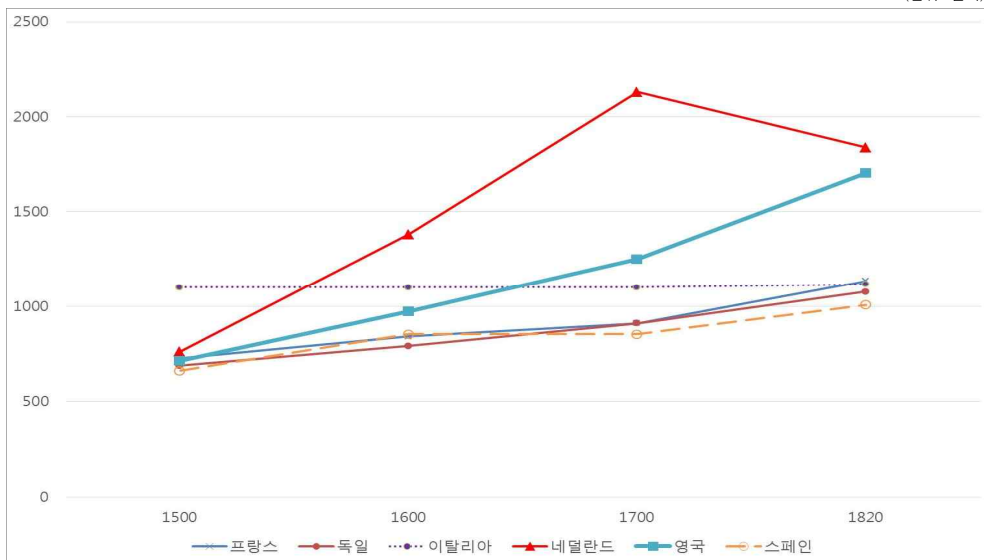
(B) GDP(1990년 실질액)

(단위: 십억달러)



(C) 일인당 GDP(1990년 실질액)

(단위: 달러)



자료: 출처 및 각 관측치의 수치는 <부록 1> 참조.



같은 기간 GDP의 증가폭은 더욱 괄목할 만하다. 1700년경만 해도 영국의 GDP는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프랑스의 절반 정도였으며, 독일, 이탈리아의 70% 정도 규모였다. 하지만 1820년 영국의 GDP는 1700년보다 3.4배 되는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의 GDP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크게 앞서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 면에서는 서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프랑스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18세기 동안 영국의 인구와 GDP 모두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GDP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초에 영국의 일인당 소득은 다른 서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며, 네덜란드와는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한다. 그리고 20~30년 뒤에는 서유럽 나아가 세계에서 일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19세기 초가 되면 영국은 GDP 규모와 일인당 소득 모두에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도달한다.<sup>7)</sup> 그 결과 영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이후 1세기 동안 영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를 건설하고 유지해 나아간다. 이러한 경제적 패권은 영국이 서유럽, 나아가 국제정치질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sup>8)</sup>

### III. 영국 대(對) 미국

영국인들이 북미대륙에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했던 17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1760년대까지 100여 년 동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하지만 본국과 식민지 간의 이해충돌이 점점 고조된 결과, 마침내 1776년에 독립전쟁이 발발하였다. 몇 년에 걸친 전쟁 끝에 마침내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식민지 주민들은 미합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다.

18세기 말 독립 당시 미국은 농업국가였다. 1790년에 전체 인구 393만명 중 5%만이 2,500명 이상이 사는 소도시나 마을에 거주하였다.<sup>9)</sup> 넓고 비옥한 토지라는 자연자원, 그리고

7) 케네스 포메란츠(2016)는 18세기 말 산업혁명 직전 중국의 생활수준이 서유럽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중국에서도 특히 선진 지역이었던 양쯔강 하류 지역은 영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책은 '대분기(The great divergence)'에 대한 역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포메란츠의 주장은 적어도 그의 책에서는 실증적으로 잘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두열(2016)을 참조하라.

8)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성장과정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서술로는 니얼 퍼거슨(2006) 등을 참조하라.

9) Chandler(1977), p. 17.

영국과의 무역관계와 같은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농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농업 중심 경제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인해 영국과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1805년부터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럽과의 무역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유입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8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불리는 미국 북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세기 초엽 미국경제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19세기 전반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19세기 초엽부터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광공업부문 성장률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0)</sup>

이처럼 19세기 초에 시작된 미국의 산업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은 19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이 같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지속은 영국과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인구를 살펴보면 독립 당시인 1790년 미국의 인구는 390만명이었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 영국 인구 790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9세기 내내 높은 인구증가가 지속된 결과 1900년 미국 인구는 백여 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7,600만명이 된다. 이러한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인구규모 측면에 있어서 양국 간 지위는 이미 1830년에서 1840년경에 역전이 이루어졌다(그림 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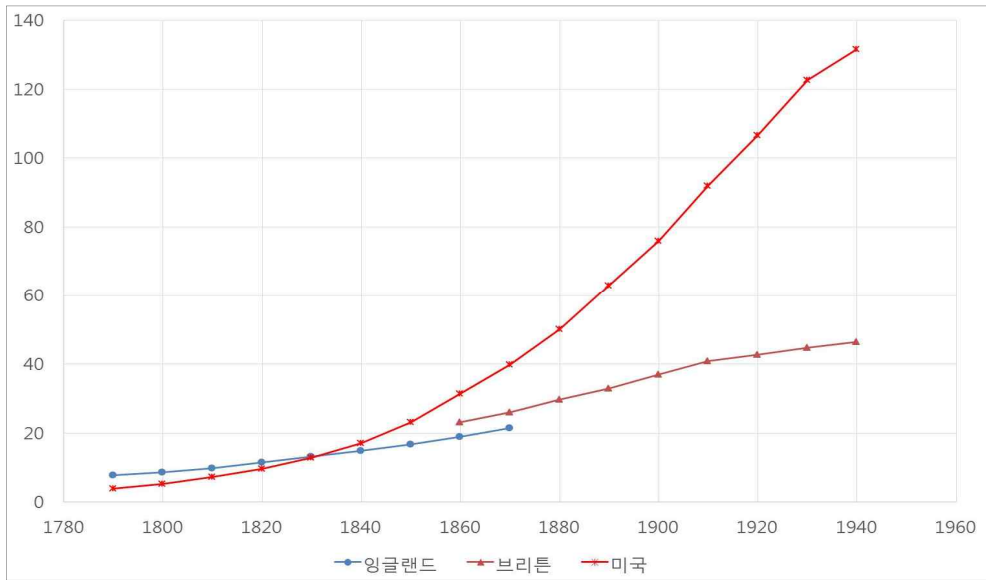
영국 등으로부터의 이민에 의해 건설된 국가가 본국보다 인구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민 유입과 높은 출산율 때문이다.<sup>11)</sup> 인구규모의 역전 이후에도 미국에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높은 출산율이 계속되어 두 나라의 인구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0년에 와서는 미국 인구가 9,200만명으로, 4,000만명인 영국의 두 배를 넘게 된다. 건국 초기부터 지속된 인구증가는 내수시장의 빠른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였고, 이것이 또다시 인구의 유입과 출산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 하였다.

10) Engerman and Sokoloff(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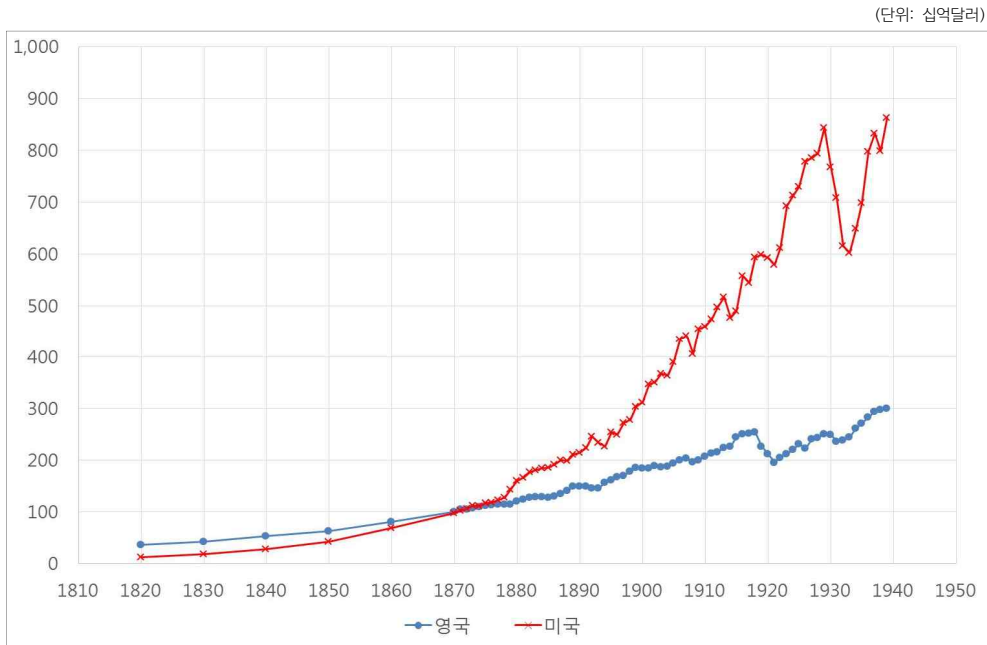
11) Haines(2000).

[그림 3] 영국과 미국의 인구, GDP, 일인당 GDP

(A) 인구(1790~19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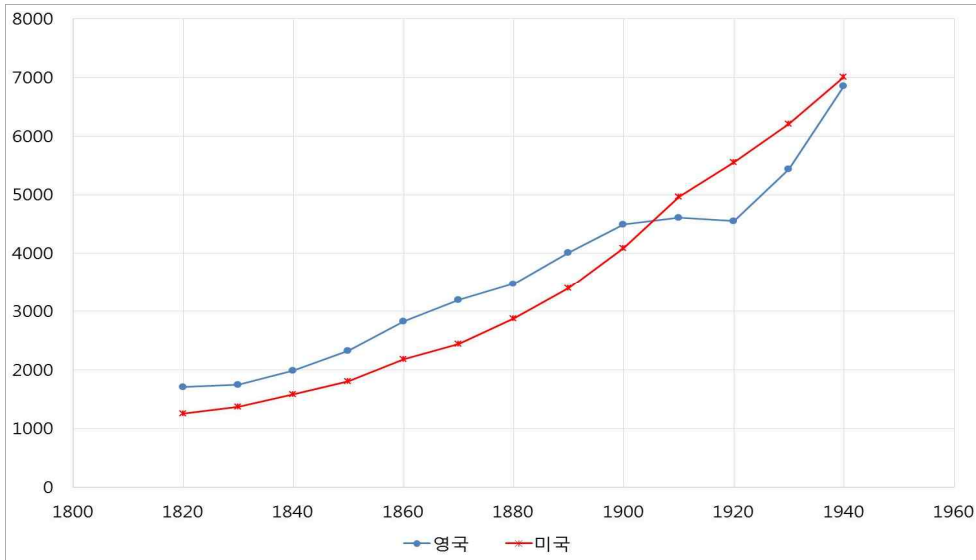
(B) GDP(1790~1940년, 1990년 실질액)



[그림 3]의 계속

(C) 일인당 GDP(1990년 실질액)

(단위: 달러)



주: 1) 영국은 1870년 이전은 잉글랜드, 1860년 이후는 브리튼의 인구임.

2) 영국의 경우는 1901년처럼 매 10년의 1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인데, 편의상 위 그림과 같이 표기하였음.

자료: Maddison(2003),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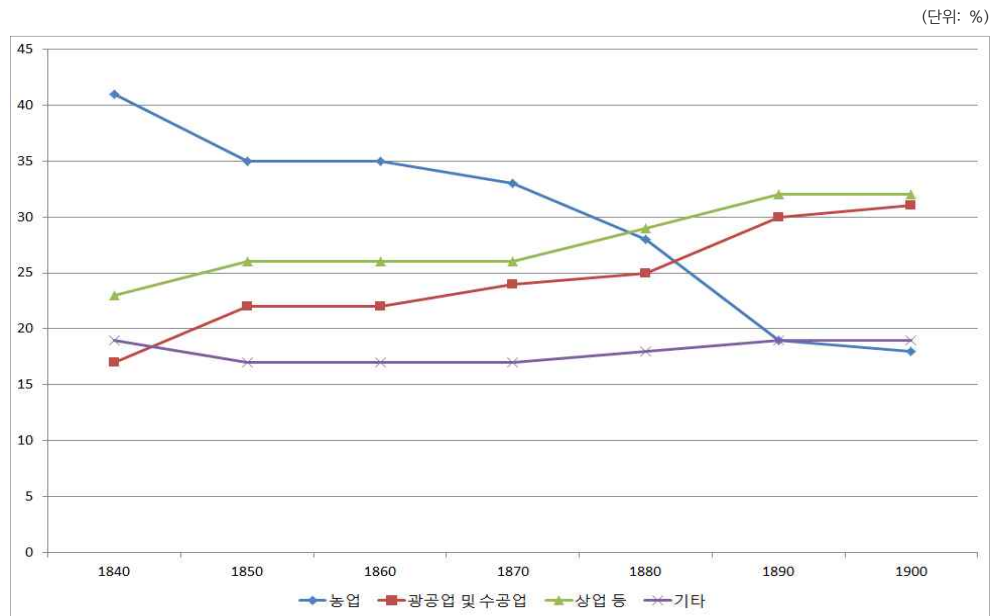
인구증가에 더해 산업화는 경제규모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820년경 미국의 GDP는 영국의 1/3에 불과하였다(그림 3(B)). 하지만 미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양국 GDP는 1870년대에 역전된다. 이후 양국 간 차이는 계속 확대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경에 이르면 미국경제의 규모는 영국의 2배,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인 1929년경에는 3배에 달하게 되었다.

인구와 GDP 모두 미국이 영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GDP의 성장 속도가 인구증가보다 더 높았다. 그 결과 19세기에 걸쳐 양국의 일인당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820년에 미국의 일인당 GDP는 영국의 74% 수준이었는데, 1900년에는 91%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인 1910년에 역전이 이루어진다. GDP가 이미 1880년대에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소득의 역전이 30년 뒤에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의 높은 인구증가율 때문이다. 미국의 인구증가율이 영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일인당 소득의 역전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경제규모 면에서나 소득 면에서 영국을 앞서게 된 근본적인 힘은 성공적인 산업화이다. 19세기 초반 하더라도 미국의 GDP 중 41%는 농업부문에서 나왔으며, 공업부문에서 나오는 것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였다(그림 4). 하지만 이후 GDP에서 공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한 반면, 농업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다. 그 결과 1880년대에 농업과 공업의 상대적 지위가 역전되고 이후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이 되면 광공업의 비중이 전체 GDP의 31%를 차지하는 반면, 농업은 18%에 불과하게 된 명실상부한 공업국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sup>12)</sup>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19세기 초부터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나아가 영국과 미국의 역전과 관련해서는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진행된 제2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영국보다 성공적이었던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석유, 화학, 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들의 등장과 성장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성공적이었던 반면, 영국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사실이 양국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그림 4] 미국 GDP의 산업별 구성



자료: Gallman(2000), p.50.

12) 부문별 통계는 Gallman(2000)을 참고하라.

13) Chandler(1992), 알프레드 찬들러(2014).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가 되면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지위는 총규모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인당 소득 측면에서도 역전이 되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피폐화한 반면, 미국은 직접적 피해를 전혀 겪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역전을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양국의 지위가 역전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운명 변화를 전쟁으로 인한 파괴 여부라는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돌리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전간기 세계경제질서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 IV.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영국과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뒤바뀌고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축이 이동하던 19세기 말에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842년에 중국 그리고 1854년에 일본이 서구 열강의 압력에 못 이겨 개항을 하였다. 조선은 1876년에 일본의 강압으로 개항을 한 이후, 1880년대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과 차례로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후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갔다.

19세기 말부터 한일합방이 일어난 19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들 수 있다.<sup>14)</sup> 이 국가들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지만, 이들 간의 경쟁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는지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지나 전략만큼이나 각국의 경제수준 그리고 조선과의 지리적 거리라는 물질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먼저 이들 주요국들의 인구를 살펴보면, 1890년 당시 인구는 중국이 가장 컸다(그림 5(A)). 중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이 시기 인구는 약 3억 8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sup>15)</sup> 이것은 위 5개국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련보다 4배 가까이 큰 규모였으며, 일본의 10배 가까운 것이었다.<sup>16)</sup>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1890년경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GDP가 가장 큰 나라였으며, 두 나라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였다(그림 5(B)). 영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60~70%, 일본은

14) 물론 프랑스, 독일 등도 동아시아에 많은 개입을 하였다. 단,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편의상 배제하였다.

15) 같은 시기 인도의 인구는 2억 8천만명이었다. Maddison(2003), p.160.

16) Maddison(2003)은 현재의 러시아가 아닌 구소련(USSR)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련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제시하기로 한다.

18% 규모였다. 그런데 이후 20년 동안 미국경제의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 간 위계는 크게 바뀌었다. 우선 중국은 1890년에는 GDP 규모가 미국과 거의 같았지만, 이후 20년간 성장이 정체된 결과 1910년이 되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뒤쳐진다. 영국과 러시아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함으로써 중국과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미국과 일본 간의 격차 역시 더욱 커졌다.

인구와 GDP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미국보다 훨씬 낮았으며, 이 기간 동안 그 격차가 증가한 것은 자명하다. 1890년 당시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미국의 1/7에 불과하였으며, 일본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그림 5(C)).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증가하여 1910년이 되면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미국의 1/10 수준까지 하락하며, 일본과의 격차도 증가하였다.

국가 간 외교나 무력충돌의 성패가 경제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력은 정부가 무력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규정함으로써, 전쟁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경제력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무력충돌의 결과가 반드시 경제력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 경제력이 우위인 나라가 열세인 나라보다 무력충돌에서 유리한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각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전쟁, 즉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은 이러한 추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선 1894년 청일전쟁을 보면 당시 중국은 일본보다 인구는 10배, GDP는 5배가 컸다. 하지만 당시 중국경제는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정체된 상황이었고 청나라 정부는 배상금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 이러한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정부 운영이나 제도 운영 등에 있어 중국의 능력이 일본보다 현격하게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력 격차는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동아시아에서 지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1904년 러일전쟁의 경우, 전쟁 발발 당시 두 나라는 일인당 소득수준이 거의 비슷하였다.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인구와 GDP가 3~3.5배 정도 컸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리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유럽 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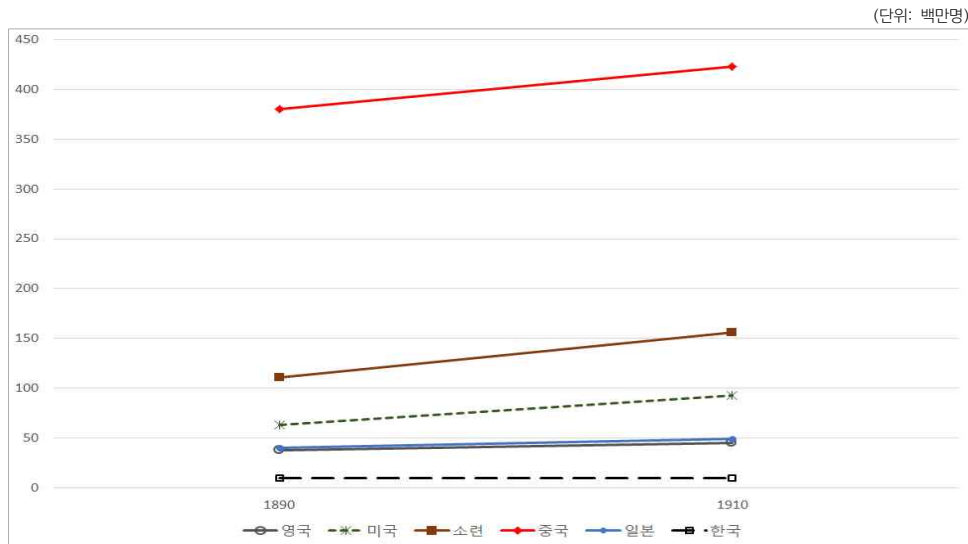
17) 청일전쟁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로는 후지무라 미치오(1997), 하라다 게이이치(2012) 등을 참조하라.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함대를 먼 거리로 이동시키고,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병력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수송능력이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리적 거리는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제정 말기 정부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병력과 무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sup>18)</sup> 결국 러시아가 이러한 객관적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의 전략이나 사기 등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우월했어야 했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이은 전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무력으로 굴복시킨 뒤, 일본은 외교 교섭을 통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한 뒤 1910년 마침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10년 당시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일본의 1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일본의 1/3 수준이었으므로 일인당 소득은 일본의 1/3 정도 규모였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열세 혹은 이러한 경제적 열세를 가져온 요인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몰아넣은 중요한 요인이었다.<sup>19)</sup>

[그림 5]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인구, GDP, 일인당 GDP(1890~1910년)

(A) 인구



18) 로스튜노프 외(2004), 특히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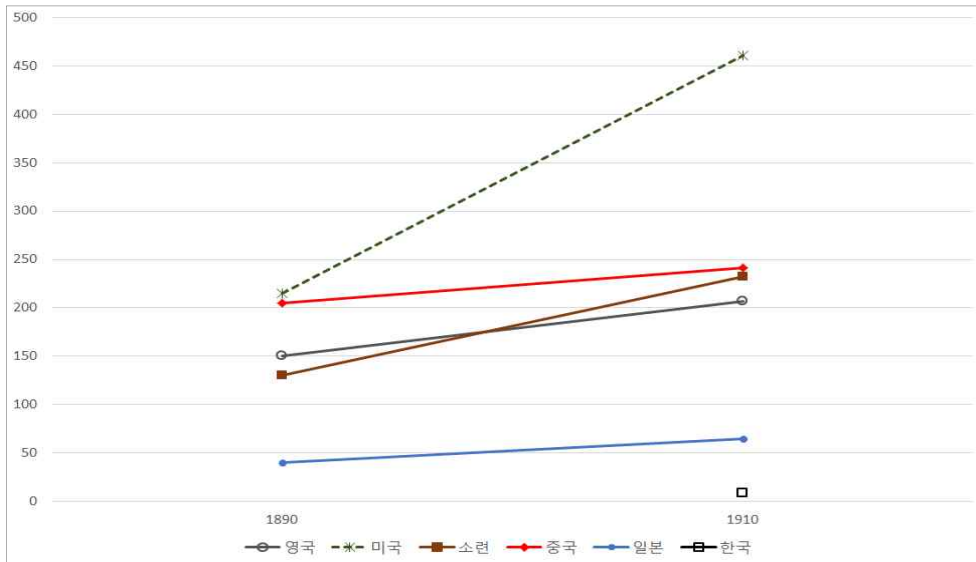
19) 김낙년 외(2012).



[그림 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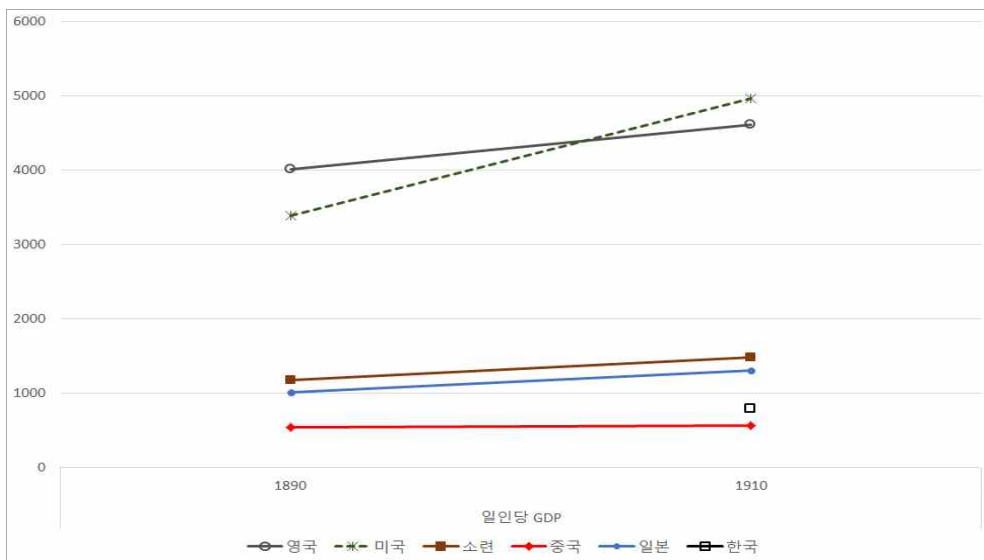
(B) GDP(1990년 실질액)

(단위: 십억달러)



(C) 일인당 GDP(1990년 실질액)

(단위: 달러)



자료: 출처 및 각 관측치의 수치는 <부록 2> 참조.

## V.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 1919~39년

20세기 전반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두 전쟁 사이 시기에 일어난 세계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사건들이 일어났다. 윈스턴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의 기간을 ‘제2차 30년 전쟁’이라고 불렀다.<sup>20)</sup> 이러한 명명(命名)은 이 사건들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이라는 생각, 즉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대공황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혼란을 낳았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가져왔다는 이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sup>21)</sup>

제1차 세계대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경제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이다. 전쟁 전에도 이미 미국경제의 규모는 유럽의 어느 단일국가보다도 컸다. 그런데 전쟁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벌려 놓게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한 4개국의 규모에 비해 80% 수준이던 것이, 전후에는 규모가 동일하게 되었다.<sup>22)</sup> 그리고 이러한 상대규모는 대공황이 발발하기 전인 1929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그림 6).

둘째는 막대한 전쟁비용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 패전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승전국들은 엄청난 전쟁부채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전승국들에 대한 최종 채권국은 미국이었다(그림 7). 전승국은 패전국인 독일 등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서 전쟁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19년 전쟁배상금 문제를 협의한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들은 독일에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하였다.<sup>23)</sup> 막대한 전쟁배상금 부담 그리고 이것의 이행 문제는 독일 등 패전국에 큰 정치,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1930년대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성립하게 되는 단초들을 제공하는 등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용하였다.<sup>24)</sup>

20) Temin(1989), p.1에서 재인용하였다.

21) 대공황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대공황을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프리드먼·슈워츠(2010), Galbraith(1954), Temin(1976) 등은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이에 비해 대공황을 국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접근은 1980년대에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초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대표적 저작은 디트마르 로터문트(2003), 아이켄그린(2016), 페인스틴·테민·토니올로(2008), 피터 테민(2001), Eichengreen(1992), Eichengreen and Temin (2000) 등이다. 한편, 양차 대전에 대한 경제사적 조망으로는 Hardach(1977)와 Milward(1984a; 1984b)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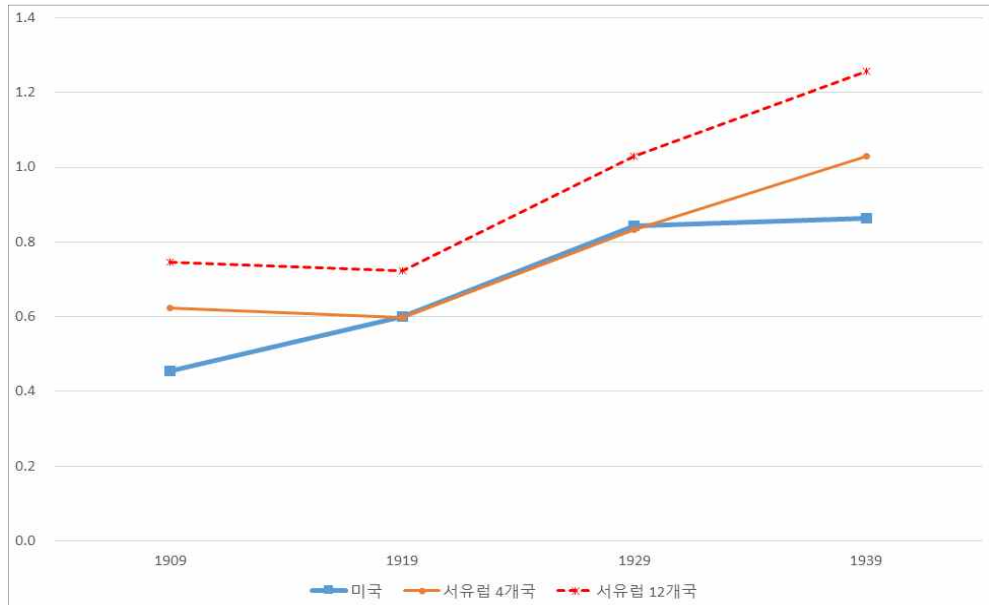
22) 1919년경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는 영국이었는데, 미국의 GDP는 영국의 두 배 이상이었다.

23) Aldcroft(1974), Eichengreen(1992), 케인스(2016), 찰스 킨들버거(1998).

24) 배상문제는 이후 몇 차례의 감축이 이루어진 뒤, 1932년 로잔느 회의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페인스틴·테민·토니올로(2008), pp.214~215.

[그림 6]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GDP(1909~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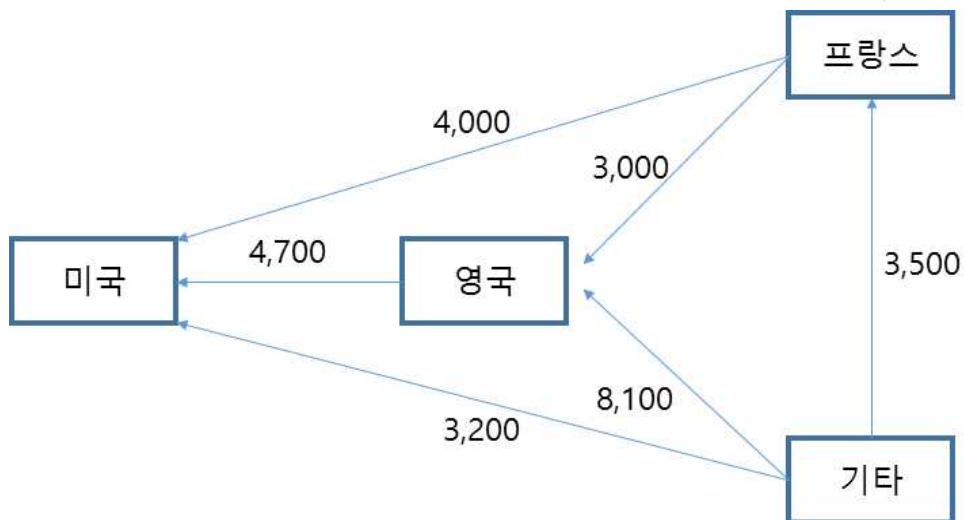
(단위: 조달러, 1990년 실질액)



자료: Maddison(2003).

[그림 7] 제1차 세계대전 말 국가 간 부채

(단위: 십억달러)



자료: Kindleberger(1986), p.24.

셋째는 국제통화체제인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의 붕괴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금태환을 기초로 한 화폐제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금을 정화(正貨, specie)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통화체제 역시 금본위제가 되었다.

국제무역 측면에서 볼 때 금본위제는 국제수지의 변화에 따라 금의 유출입을 통해 국내경제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이 조정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만일 A국이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금의 유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무역이 균형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금의 유출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시 무역수지가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인위적인 조절 없이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전쟁기간 동안 전비 조달을 위한 통화 발행이 증가하자, 금태환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뒤 참전국의 정책당국자들은 경제 재건을 추진하면서 전쟁 전의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통화의 금태환을 회복하고 가능한 한 전쟁 전의 가격으로 태환비율을 결정할 경우, 실물경제가 자연스럽게 전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sup>25)</sup>

이러한 이론에 기초해서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전전의 태환비율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국가별로 금본위제로의 복귀 시기 혹은 태환비율은 차이가 있었는데, 영국은 1925년에 파운드당 4.86달러라는 전전 평가대로 금본위제로 복귀하였다.<sup>26)</sup>

불행하게도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우선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전쟁 중 발행한 통화의 급격한 환수를 수행해야 했는데, 이것이 신용 위축을 가져옴으로써 기업도산과 실업 그리고 경기침체를 유발하였다. 금본위제에 기반한 이론으로 보면 이러한 경기침체는 필연적이었다. 정책당국자들은 이것을 알고도 일시적인 고통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리라는 기대하에 수행하였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1926년 총파업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본위제를 통해 국가 간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1920년대 후반 프랑스와 미국은 계속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금 유입이 심화되어 간 반면, 영국은 적자가 계속되어 국가 간 국제수지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어

25) Eichengreen and Temin(2000)은 전간기 주요국의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공유하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나의 망델리떼(mentalite)로 보고, 이러한 망델리떼가 대공황을 초래하였고, 그러한 망델리떼로부터의 탈피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26) 각국이 언제 금본위제로 복귀하였으며 교환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페인스틴·테민·토니올로(2008)를 참조하라.

갔다. 결국 이러한 불균형은 국제금융질서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므로 국제적인 은행 연쇄파산이 발생하였으며, 1929년 주식가격 폭락 이후 미국에서도 대규모 은행공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은행공황 그리고 경기침체가 다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경제는 공황으로 치달는다.

이상에서 간략히 정리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 노력이 있었다면 해결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은 이러한 실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협상에서 영국은 전쟁배상금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국제정치질서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럴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기간 동안 주요 승전국들에 돈을 빌려주었던 최대 채권국인 미국의 경우,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개별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제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하면서, 애초부터 국제연맹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대공황이 발발한 이후 1933년 런던에서 열린 세계경제회의(London Economic Conference)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27)</sup>

대공황의 상황 속에서 각국은 국제 공조 대신 자국의 안정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각자도생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금본위제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 그리고 보호주의 관세를 통한 자국 시장의 보호였다. 세계 각국은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였는데, 금본위제 탈피는 세계경제를 몇 개의 블록경제로 분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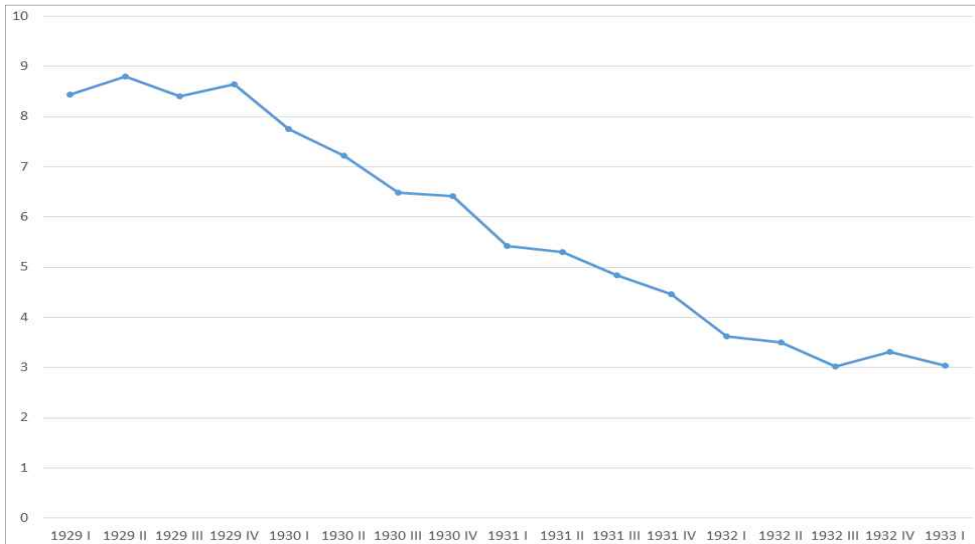
아울러 1930년 미국 의회는 스무트-홀리(Smoot-Hawley Tariff)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품목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였다.<sup>28)</sup> 이 법은 원래 대공황이 발발하기 이전에 입법되었지만 경기침체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발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보호무역적 대응조치로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1932년 영국이 100년에 걸친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일반관세(General Tariff)를 도입하는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응하여 보호무역정책들을 시행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 무역은 1929년부터

27) 페인스틴·테민·토니올로(2008), p.215.

28) 스무트-홀리 관세는 2만여 품목에 대해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법안이었다. 관세부과품목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은 60%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에 가까웠다. 스무트-홀리 관세에 대해서는 김두일(1994) 등을 참조하라.

[그림 8] 전 세계 분기별 무역액(1929년 1분기~1933년 1분기)

(단위: 십억달러)



자료: League of Nations. Kindleberger(1986)에서 재인용.

1933년 기간 동안 1/3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8).<sup>2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간기 경제를 혼란에 빠트린 중요한 요인은 국제적 협조의 부재였다. 왜 국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는 헤게모니(hegemony)의 부재이다. Charles Kindleberger는 대공황의 원인으로 헤게모니의 부재를 꼽았다. 즉,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제질서는 영국의 리더십에 의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상대적 지위는 하락하였고 미국이 최고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영국은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반면, 미국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의지가 없었다. 그 결과 국제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sup>30)</sup>

둘째는 신뢰와 협조(credibility and cooperation) 체제의 붕괴이다. Barry Eichengreen은 금본위제에 대한 신뢰와 국가 간 협조체제가 전전의 국제경제 안정을 가져온 요인이었다고

29) Kindleberger(1986).

30) Kindleberger(1986).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붕괴된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전간기의 파국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sup>31)</sup>

위 두 가설은 서로 다른 해석과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국제경제질서를 안정화하는 힘의 공백이 대공황을 야기하였다는 사실이다. Kindleberger식으로 본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의 의지와 능력에 주목할 것이고, Eichengreen식으로 본다면 국가 간 협회의 틀이 형성된 측면에 주목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 작동한다기보다는 국가 간 협조 그리고 이러한 협조를 조율하는 주도국의 존재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기초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승전국은 물론이고 패전국들에게도 마샬원조(Marshall Aid)라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은 국제통화체제의 재건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을 창설하였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을 조직하였다. 나아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결성을 주도하였다. 결국 이러한 체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 VI. 결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정치경제질서는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어 온 주요 국가들의 경제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영국은 19세기 초가 되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데, 이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말부터 진행된 산업혁명 때문이었다. 이후 19세기 동안 영국은 이러한 경제력을 기초로 해서 국제경제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국제정치경제에서 영국의 지위는 19세기 말이 되면 쇠퇴하게 되고 미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인 힘 역시 경제력의 변화였다. 19세기 말에 진행된 제2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31) Eichengreen(1992), Flandreau(1997).

32) 전후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Foreman-Peck(1995), Milward(1984b), Kenwood and Lougheed(1983), 아이켄그린(2011; 2016) 등을 참조하라.

도 성공적이었던 것이 영국과 미국 간 경제력의 역전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이 세계경제 및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의 지위가 바뀌는 시기,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조망하였다. 이 시기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한 개괄이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는 국가의 리더십 그리고 주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조가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어쩌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1930년대의 역사는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계경제, 나아가 정치질서가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당시의 역사를 규정하는 힘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각 국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편, 19세기 말 국제질서 전환기에 동아시아에서 여러 세력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오늘날 깊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00년 전 한반도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당시의 거대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라는 신흥국가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충돌과 외교 협상은 각 국가의 경제력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국가의 경제력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도 분명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그레고리 클라크, 『멜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왜 부국의 원조가 빈국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은주 옮김, 한스미디어, 2009.
- 김낙년 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김두열, 「전간기 미국관세의 실효보호율」, 『경제사학』, 제18권, 1994, pp.221~247.
- 김두열, 「“오렌지와 오렌지”? 아니면 “오렌지와 사과”?」, 케네스 포메란츠,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세계 경제의 형성』, 김규태·이남희·심은경 옮김, 에코리브르, 2016에 대한 서평, 미간행 초고, 2016.
- 니얼 퍼거슨, 『제국』, 김종원 옮김, 민음사, 2006.
- 디트마르 로터문트,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양동휴·박복영·김영완 옮김, 예지, 2003.
- 로스투노프 외, 『러일전쟁사』, 김종헌 옮김,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 프리드먼·슈워츠, 『대공황, 1929-1933년』, 양동휴·나원준 옮김, 미지북스, 2010.
- 아이켄그린, 『글로벌라이징 캐피탈: 국제통화체제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강명세 옮김, 미지북스, 2011.
- 아이켄그린, 『황금 족쇄: 금본위제와 대공황, 1919~1939년』, 박복영 옮김, 미지북스, 2016.
- 알프레드 찬들러, 『보이는 손』, 김두열·신해경·임효정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 찰스 킨들버거, 『대공황의 세계』, 박명섭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1998.
- 케인스, 『평화의 경제적 결과』, 정명진 옮김, 부글북스, 2016.
- 케네스 포메란츠,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세계 경제의 형성』, 김규태·이남희·심은경 옮김, 에코리브르, 2016.
- 피터 테민, 『세계 대공황의 교훈』, 이현대 옮김, 해남, 2001.
- 페인스틴·테민·토니올로,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양동휴·박복영·김영완 옮김, 동서문화사, 2008.
- 후지무라 미치오, 『청일전쟁』, 허남린 옮김, 소화, 1997.
- 하라다 게이이치, 『청일, 러일전쟁』, 최석완 옮김, 어문학사, 2012.
- Aldcroft, Derek, *From Versailles to Wall Stree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Chandler, Alfred,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Harvard, 1992.

- Eichengreen, Barry, *Golden Fetters: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1919–1939*, Oxford, 1992a.
- Eichengreen, Barry, “The Origins and Nature of the Great Slump Revisited,” *Economic History Review*, Vol. 45, No. 2, 1992b, pp.213~239.
- Eichengreen, Barry and Peter Temin,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Vol. 9, No. 2, Jul. 2000, pp.183~207.
- Engerman, Stanley and Kenneth Sokoloff,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1790–1914,” in Stanley Engerman and Robert Gallm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 The Long Nineteenth Century*, Ch. 9, Cambridge, 2000.
- Fogel, Robert W., *The Escape from Hunger and Premature Death, 1700–2100: Europe, America and the Third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Foreman-Peck, James, *A History of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ince 1850*, 2nd ed, New York, 1995.
- Galbraith, John Kenneth, *The Great Crash, 1929*, Boston, 1954.
- Gallman, Robert,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in Stanley Engerman and Robert Gallm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 The Long Nineteenth Century*, Ch. 1, Cambridge, 2000.
- Haines, Michael,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1790–1920,” in Stanley Engerman and Robert Gallm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 The Long Nineteenth Century*, Ch. 4, Cambridge, 2000.
- Hardach, Gerd, *The First World War 1914–1918*, London, 1977.
- Kenwood, A. G., and A. L. Lougheed,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1820–1980: An Introductory Text*, George, Allen & Unwin, 1983.
- Kindleberger, Charles,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 Maddison, Angus,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OECD, 2003.
- Malthus, Thoma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1985.
- Milward, Alan,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1*, University of

- California Press, 1984a.
- Milward, Alan, *War, Economy, and Society, 1939–1945*, London, 1984b.
- Temin, Peter, *Did Monetary Forces Cause the Great Depression?*, Norton, 1976.
- Temin, Peter,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MIT Press, 1989.
- Wrigley, E. A. and R. S. Schofield,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A Reconstruction*, Cambridge, 1981.

## <부 록>

### <부표 1> 1500~1820년 서유럽의 인구와 GDP

#### (1) 인구

(단위: 백만명)

| 연도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
| 1500 | 3.9  | 15.0 | 12.0 | 10.5 | 1.0  | 6.8  |
| 1600 | 6.2  | 18.5 | 16.0 | 13.1 | 1.5  | 8.2  |
| 1700 | 8.6  | 21.5 | 15.0 | 13.3 | 1.9  | 8.8  |
| 1820 | 21.2 | 31.3 | 24.9 | 20.2 | 2.3  | 12.2 |

#### (2) GDP(1990년 실질액)

(단위: 십억달러)

| 연도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
| 1500 | 2.8  | 10.9 | 8.3  | 11.6 | 0.7  | 4.5  |
| 1600 | 6.0  | 15.6 | 12.7 | 14.4 | 2.1  | 7.0  |
| 1700 | 10.7 | 19.5 | 13.7 | 14.6 | 4.0  | 7.5  |
| 1820 | 36.2 | 35.5 | 26.8 | 22.5 | 4.3  | 12.3 |

#### (3) 일인당 GDP(1990년 실질액)

(단위: 달러)

| 연도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
| 1500 | 714  | 727  | 688  | 1100 | 761  | 661  |
| 1600 | 974  | 841  | 791  | 1100 | 1381 | 853  |
| 1700 | 1250 | 910  | 910  | 1100 | 2130 | 853  |
| 1820 | 1706 | 1135 | 1077 | 1117 | 1838 | 1008 |

자료: Maddison(2003).

<부표 2> 1890~1910년 동아시아 관련 주요 국가의 인구와 GDP

(1) 인구

(단위: 백만명)

|      | 영국   | 미국   | 소련    | 중국    | 일본   | 한국   |
|------|------|------|-------|-------|------|------|
| 1890 | 37.5 | 63.3 | 110.7 | 380.0 | 40.1 | 9.8  |
| 1910 | 44.9 | 92.8 | 156.2 | 423.0 | 49.5 | 10.1 |

(2) GDP(1990년 실질액)

(단위: 십억달러)

|      | 영국    | 미국    | 소련    | 중국    | 일본   | 한국  |
|------|-------|-------|-------|-------|------|-----|
| 1890 | 150.3 | 214.7 | 130.6 | 205.3 | 40.6 |     |
| 1910 | 207.1 | 460.5 | 232.4 | 241.3 | 64.6 | 8.0 |

(3) 일인당 GDP(1990년 실질액)

(단위: 달러)

|      | 영국   | 미국   | 소련   | 중국  | 일본   | 한국  |
|------|------|------|------|-----|------|-----|
| 1890 | 4009 | 3392 | 1180 | 540 | 1012 |     |
| 1910 | 4611 | 4964 | 1488 | 571 | 1304 | 789 |

자료: Maddison(2003).